금주의 법구-〈대지도론〉
성내는 마음은 독의 근본이어서
모든 선근을 없애버린다.
성냄을 없애면 근심이 없어진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4호 2017년 2월 8일 수요일

日 반입 관음좌상 부석사行 '제동'

법원, 검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엇갈린 法적용

법원의 인도판결에 따라 서산 부석사로 돌아갈 예정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의 환지본처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 명령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가집행 정지신청을 1월 31일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의 1월 26일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를 낸 상황이다.

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금동보살좌상의 부석사행은 지난한 소송전이 예고된다. 현재 검찰 측은 "판결이 확정 전 불상을 인도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고,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달리 나올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법원 허가에 대해 그동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추진해 온 부석사와 불상봉안위원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검찰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집행정지를 추진했다.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판결은 전자 재판 형식이라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1월 31일 오후까지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되자 바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원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강제집행 정지와 검찰 항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분히 2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변호사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역시 "검찰의 항소에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어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도난품이니 우선 반환하고 이후에 협의를 통해 환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원우 스님은 "2012년 붙잡힌 한국의 도굴범들은 지금 자신들의 죗값을 치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소유자가 부석사임이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문화재 도굴단이 쓰시마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검거돼 법원의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와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환수 및 부석사 봉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4월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송 일지

2012. 10 한국 절도단, 일본 쓰시마 섬서 불상 2점 밀반입해 검거

2013. 2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0년 경 왜국 약탈" 주장.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제기 대전지법 받아들여

2015. 7 소유자 주장없던 동조여래입상만 일본 반환

2016. 4 서산 부석사, 정부 상대로 불상 인도청구 소송

2017. 1. 26 대전지법 "정부 보유 불상 부석사에 인도" 판결. 검찰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2017. 1. 31 대전지법, 검찰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확정 판결 전까지 불상 이운 금지



雪國으로 뒤덮인 기도도량 눈이 내려 사찰 처마 끝부터 바닷가까지 온통 흰 세상이다. 1월 22일 속초 낙산사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폭설로 눈부신 설경산수가 펼쳐졌다. 혼탁한 세상을 덮는 눈처럼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길 발원해보자. 사진은 눈 덮인 홍련암 경내. **사진=고원영 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본격 검토

종헌특위, 2일 소위구성… 3월 임시회 발의 목표
종헌 개정 · 특별법 제정 등 주2회 논의 '속도전'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이 가능할지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는 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종회의원 함결 · 성화 · 오심 · 선광 · 원경 · 제민 · 혜초 · 묘주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멸빈자 사면 논의가 전반기 특위서 이월된 점을 비롯해 종정 진제 스님 교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의지 등에 공감하며 종단 화합차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임시회에 발의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위 간사 성화 스님은 "전반기 특위 논의안건과 사부대중위원회 의견이 이번에 이월됐다.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도 신년하례 때 멸빈자 사면에 대해 말하셨으니 과거 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장 함결 스님은 "멸빈에 관한 문제는 종단 숙원이기도 하다. 재심무효화 조치나 호계원 성찰, 멸빈제도 삭제, 사법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사면은 공감한다"면서 "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방법과 단서조항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사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 후 일정기간 종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3월 임시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2회 정도 소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사면 관련 내용이 담긴 2007~2009년 종헌개정안과 부결된 개정안 등을 참고해 법리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전반기 특위서 논의한 징계법 신설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징계유형별로 각각 형량의 차등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안은 호법부가 '현행 승려법 내 징계부분 보완'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위원회에 일임해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입장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소위원회 회의는 2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韓전통산사 7곳, 세계유산 등재 공식 신청

공식명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내년 7월경 최종 결정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신청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추진위)는 1월 27일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공식 등재신청 명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영문으로는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다. 추진위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산사'는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승원(僧院)으로서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2013년 '한국의 전통산사(Traditional Buddhist Mountain Temples of Korea)'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으며, 지난해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18년도 7월경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노덕현 기자

